

□특집□

Y2K 해외동향 및 정부의 대응 전략

이 용 효^{*}

◆ 목 차 ◆

- | | |
|-------------|------------|
| 1 서 론 | 4 분야별 추진현황 |
| 2 해외 각국의 동향 | 5 향후 추진계획 |
| 3 정부의 대응전략 | 6 맺음말 |

1. 서 론

금세기 최대의 지구촌 현안으로 등장한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이하 Y2K)문제는 금년 초부터 그 전조를 알리는 국내외 사례가 속속 발표되어 세계각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Y2K문제는 우리생활 주변에서 이용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은 물론 각종 제어시스템과 자동화설비 등 IT, Non-IT분야에서 문제가 발생되며, 2000년 이전에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시간적 제약성과 국가사회전반에 걸친 문제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대의 경제활동은 정보기술을 주요수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간, 산업간, 국가간에 연계성이 매우 높아 한 분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쇄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80년대부터 본격 추진된 정보화의 급진전과 산업화과정을 거쳐오는 동안 산업 각 분야에 자동화설비나 장비가 널리 보급되어 Y2K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매우 큰 실정이다. 국제적으로도 Y2K문제 해결정도를 신용도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무역 거래에 있어서도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

는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Y2K문제를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8년 3월부터 국무조정실에 대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파급성이 큰 금융, 의료, 통신, 전력 등 주요업무를 중점관리분야로 선정하여 정부 주도로 집중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금융, 통신, 전력, 행정 등 국가의 주요 분야는 대부분 변환 또는 테스트단계를 수행중이며 외국에서도 우리의 Y2K문제 해결노력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해외각국의 대응실태와 국제기구의 동향을 먼저 살펴본 후, 국가사회 전반의 Y2K문제 해결 추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전략을 알아보고, 주요분야별 Y2K추진 현황을 살펴본 후, 앞으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2. 해외 각국의 동향

선진각국은 '95년경부터 Y2K문제를 인식하여 정부주도로 문제해결을 추진중에 있으며 UN, OECD 등 국제기구들은 범국가 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국가간 정보공유 및 국제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는 Y2K대응정도를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 정희원 · 한국전산원 Y2K종합지원센터장

각국의 동향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98년 2월 4일 연방기관의 대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명령(Year 2000 Conversion)을 발령, 대통령 직속으로 연방기관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예산관리처(OMB)는 24개 연방기관의 Y2K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삭감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미 의회는 Y2K문제와 관련된 정보공개 및 공유를 장려하기 위하여 「2000년 정보공개법(Year 2000 Information Disclosure Act)」을 '98년 10월에 제정하여 업체의 정보공개를 적극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95년 상반기부터 정보서비스산업협회에서 Y2K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정보통신업계를 중심으로 민간차원에서 대응을 해오다가 '98년 9월 고도정보통신사회 추진본부에서 「컴퓨터2000년문제에 관한 행동지침」을 마련, 정부차원에서 대응일정과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Y2K문제해결 촉진을 위해 통산성, 대장성에서 각종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말 가트너그룹의 평가에서 경제규모 및 타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대응수준이 낮은 3등급 국가로 평가된 바 있다.

영국은 Y2K문제에 관한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컴퓨터통신처(CCTA) 산하에 BDG(Millennium Bomb Discussion Group)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블레어 총리는 '98년초 향후 1년간 2만명의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과 공공부문에서 약 7조5천억원을 투입 예정임을 발표한다.

호주는 '98년 2월 정부와 민간기업회원들로 구성된 연방정부2000년문제 운영위원회의 책임하에 Year2K 산업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다. 운영위원회 산하의 정보기술처(OGIT)가 지침, 예산, 지원현황을 종합하여 장관, 내각,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정부연계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전문

가지문위, 각종 산업협회 등과 상호간 연계하여 활동중이다 호주국세청은 과세규칙(Taxation Ruling)을 시행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국제기구 동향

UN에서는 지난 98년 6월 26일 2000년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후 98년 12월 11일 「Y2K National Coordinators Meeting」을 개최하여 국가별 비상계획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지원을 논의한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UN의 Y2K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UN은 '99년 1월 가상협력센터를 설치하여 인터넷을 통해 각국과의 정보교류를 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응상황을 국제적으로 알리는데 좋은 매개체가 될 전망이다.

APEC은 지난 '98년 10월 제4차 전자상거래 Task Force회의에서 각 회원국이 Y2K대응정보를 공유키로 합의한바 있으며, 제6차 APEC 정상회담('98 11. 18)에서 Y2K문제에 대한 인식제고와 문제해결을 위한 조속한 조치를 강조한바 있는데 역내 「비상계획전문가회의」를 '99년 상반기 중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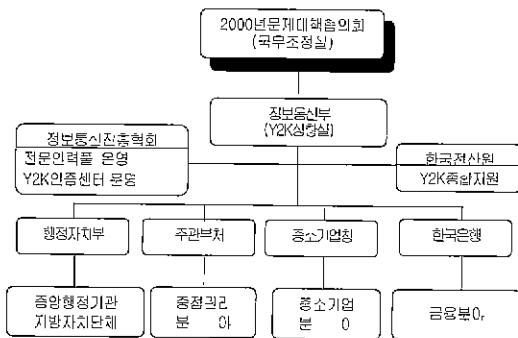
OECD는 각국의 대응상황을 평가하고 문제인식제고와 국제사회의 공동노력 촉구를 위하여 「2000년문제 : 영향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자상거래 각료회의('98. 10) 및 Global Year 2000 Summit('98. 10)에서 배포한 바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Joint Y2K Council」을 구성하여 각국 금융기관의 Y2K추진상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무디스, S&P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은 금융기관의 Y2K문제해결 대응현황을 주요신용평가항목에 포함하고 있다.

3. 정부의 대응전략

Y2K추진체계

우리나라의 Y2K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추진은 '97년 2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고 범정부차원에서의 추진은 국무조정실에 「컴퓨터2000년문제대책협의회」를 구성한 98년 3월부터라 할 수 있는데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한국전산원, 민간전문가 등 민·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월1회 개최하여 부문별 추진실태를 파악·점검하고 지원하는 방안 및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한편, 각 분야 2000년 문제해결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는 추진체계를 (그림 1)과 같이 구성하고 있다. 또한, 2000년문제 해결활동을 총괄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정보통신부는 Y2K상황실을 설치하여 국가사회전반의 추진실태관리 및 대책을 지원하고,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진실태관리와 대책을 지원하며, 산업자원부는 Non-IT 분야에 대한 추진실태관리와 지원을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추진실태관리와 지원을 맡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산하단체 및 중점관리분야의 추진실태관리와 함께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00년문제 대응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각기관별 책임과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림 1) Y2K추진체계

Y2K문제해결 진척관리

2000년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로 '문제인식', '영향평가', '변환', '검증', '시험운영'의 5단계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표 1)과 같이 범국가적 차원의 문제해결 대응 일정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대응기한 기준으로 추진진도를 격월로 평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있으며 중점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완료 시점에 분야별 진척사항을 평가하여 보고하고 있는데 '99년부터는 월별 관리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표 1) Y2K문제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응일정

단계	영향평가	변환	검증	시험운영
범국가적 대응일정	1998. 8. 31	1999. 2. 28	1999. 4. 30	1999. 8. 31

중점관리분야 선정 및 관리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사회적 영향이 큰 금융, 의료, 통신, 전력 및 에너지, 항만, 운송, 중소기업, 산업자동화설비, 원전, 중앙지방행정 등을 10대 중점관리분야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해 왔는데 금년에는 환경, 국방, 수자원 등 3개분야를 추가하여 관리하고 있다. 중점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현장점검이 수시로 실시되고 있으며 해외의 관련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대응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중점관리분야 현황

분야	금융	국방	통신	운송	에너지	원전	환경	중소기업
주관기관	한국은행	국방부	정보통신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전고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관리기관	산업자동화심비	원전	의료	중소기업	수자원	환경	중앙/지방행정	중소기업청
추진기관	산자부	과기부	보건복지부	중기청	전고부	취경부	행시부	중소기업청

전문기술인력의 확보

Y2K문제해결에 소요되는 인력 중 17,2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어 실업대책차원에서 '98년

과 '99년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양성할 예정인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실업자 재취업 교육을 통하여 「전문기술인력풀」을 구축하여 운영하며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중소기업 Y2K문제 해결지원 인력을 양성하고 실업자 재취업교육기관을 통해서도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터넷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전산원의 Y2K홈페이지를 국내대표 홈페이지로 하여 국내·외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있다.

(표 3) Y2K인력양성 계획

(단위 : 명)

수관 기연 인도	부족 인력	단기 SI업체	정부의 양성계획				합계
			한국정보통신진흥 협회	중소 기업청	실업자재취업 교육훈련기관	계	
1998년	11,200	1,500	1,500	1,200	3,690	6,390	7,890
1999년	6,000	3,700	500	1,000	4,110	5,610	9,310
합 계	17,200	5,200	2,000	2,200	7,800	12,000	17,200

관련 제도의 개선

Y2K문제 해결 촉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Y2K와 관련한 영향평가, 변환, 검증, 시험운영 관련 용액비용에 대해 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시행중이며 은행 등 금융계는 Y2K추진실태를 여신심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소에서는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에 Y2K 대응현황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물품구매시 Y2K해결 제품구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보조금 및 연구개발비 지급시에도 차등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협력 및 정보유통체계의 조성

Y2K문제는 특정기관이나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선진국들은 상호 정보교환 및 협력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활발한 국제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UN, OECD, APEC, BIS 등 국제기구와 외국의 평가기관, Y2K관리기관과도 인

금융분야는 한국은행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추진 중인데 정보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예금, 대출, 증권, 외환 등 금융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칠수가 있다 '98년 12월 기준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대부분의 기관이 변환단계를 마무리하고 외부기관과의 연계모의테스트를 준비중이다. '99년 3월과 4월에는 은행, 증권 등 금융권별로 연계모의테스트를 실시하고 '99년 6월 예정인 미국, 영국, 일본 등 중앙은행간 「Global Payment Systems Test」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력 및 에너지분야는 산업자원부를 주관기관으로 추진중인데 전력, 가스등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되는 각종설비에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외국산설비의 Y2K문제 해결이 관건이다. '98년 12월 기준으로 변환단계 작업을 진행중이며 외국산설비에 대해서는 국제협력 채널을 통해 '99. 8월까지는 문제 해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원전분야는 과학기술부가 주관기관으로 전체 발전량의 41.6%를 차지하는 원전 16기 설비중 안전설비에는 Y2K문제의 영향이 없으며 제어설비, 감시설비 등에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 '98년 12월 기준으로 영향평가를 2회 실시하고 변환단계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99년 6월까지 국내 원전과 동일모델인 미국, 캐나다 원전의 해결 추진상황과 연계하여 작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다.

통신분야는 정보통신부가 주관기관으로 통신의 핵심설비인 교환기, 통신망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98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4대 기간 통신사업자(한국통신, 데이콤, SK텔레콤, 신세기통

신)는 국내의 공급사와 공동으로 변환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금년 4월까지 자체 모의테스트를 실시하고 '99년 6월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실시예정인 국제연계테스트(32개국)에 참여할 계획이며 '99년 8월까지 문제해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산업자동화설비분야는 산업자원부가 주관기관으로 사회 각 분야에 문제가 내제되어 있고 최종대응을 공급사에게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 해결이 매우 어려운 분야이다. '98년 12월 기준으로 표본조사결과 문제해결 완료률이 26.5%로 진척도가 향상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금년에는 업종별로 Y2K문제해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보차원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 해외공급사에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운송분야는 건설교통부 및 철도청이 주관으로 항공분야는 비행기, 관제시설, 예약시스템 등에 철도분야는 신호체계, 급전시스템, 승차권 발매업무 등에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다. '98년 12월 기준으로 김포, 김해, 제주 등 주요공항과 관제소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현장 실사를 마쳤으며 대부분의 시스템이 변환단계 또는 테스트 단계에 있다. 철도분야의 승차권 발매, 신호제어 업무는 변환작업을 마무리하였다. 항공분야는 '99년 4월까지, 철도분야는 '99년 6월까지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항만분야는 해양수산부가 주관기관으로 선박, 관제시설, 항만을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등에서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다. '98년 12월 기준으로 항만 운영정보시스템은 문제해결을 완료하였으며 대부분의 시설은 변환단계를 마무리하고 테스트를 진행중이다. '99년 5월까지 공공분야의 Y2K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나 특히, 민간운영선박 중 Y2K문제 발생시 파급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여객선과 위험물 운반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직접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분야는 보건복지부가 주관기관으로 병원에 약, 진료비 청구업무 등 정보시스템 부문과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기기에 문제발생이 가능하며, 의료기기의 경우 해결에 어려움이 많다. '98년 12월 기준으로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중앙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정보공유와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중이며 금년에는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분야는 중소기업청이 주관기관으로 W/S급 이상의 컴퓨터를 보유한 2만여개의 중소기업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다. '98년도에는 6000여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인력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현장진단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추진이 부진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자금, 인력, 기술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

중앙/지방행정분야는 행정자치부가 주관기관으로 세금, 토지 등 민원서비스 업무의 Y2K문제해결을 주요과제로 삼고 있다. '98년12월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은 변환 또는 테스트 단계이고 지방행정기관은 변환단계를 추진중이며 '99년 8월까지 직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5. 향후 추진계획

정부가 '98년도에는 국가사회전반의 Y2K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하여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공공, 민간 부문의 문제 해결 추진을 위한 지침과 방법론의 제공, 정보유통체계의 구축, 국제기구와의 관계정립, 홍보 등을 중점 추진하였는데 금년에는 이제 채 1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체계를 보다 더 보강하고 중소기업 등 취약한 분야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자금, 인력, 기술지원대책을 강구하며 Y2K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외신인도 제고 등을 위하여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와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금융, 통

신 등 중점분야별로 모의테스트를 실시하고 비상 계획을 수립하는 등 금년내 Y2K문제해결 완수를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추진체계의 보강

국무조정실에서는 국무총리 주재의 「Y2K관계 장관회의」를 격월로 개최하여 Y2K문제 해결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정부차원의 대응조치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Y2K문제 대책협의회」의 중점관리분야 위원을 보강하여 각 기관의 추진 상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정보통신부차관 직속으로 「Y2K상황실」을 설치하여 중점관리분야의 추진실태 점검 및 평가, 모의테스트의 지원, 국제협력 및 홍보활동 등을 중점 수행할 예정이다. 각 부처별로는 최고 관리층이 소관 중점관리분야, 산하기관, 민간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Y2K문제를 직접 점검하고 독려하는 등 최고관리층의 책임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점분야의 관리강화

각 기관의 보유설비에 대한 Y2K문제의 해결책임은 1차적으로 해당기관장에게 있으며, 각 부처는 소관별로 중점분야에 속한 기관의 Y2K문제 해결 추진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주관 기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Y2K문제해결 및 관리책임을 명확화 하고 중점분야를 세분화하여 관리책임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점검 활동의 내실화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합동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문제 발생시 사회적 영향이 큰 기관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중점분야에 속한 기관이 Y2K문제해결을 완료하면 스스로 그 결과를 선언하는 「자기인증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정보공유 및 제도개선

분야별 Y2K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을 위한 「업종별협의체」를 구성하여 비정보시스템의 문제 유무와 문제해결 정보DB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며, 제조업체가 생산제품에 대한 Y2K문제해결 정보를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토록 하여 중소기업, 가정 등 제품 이용자가 문제해결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문제해결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으로 Y2K문제 해결업체를 입찰방식으로 선정할 경우 업체 선정기간이 많이 걸리므로 시간 단축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한편 KS 품목심사,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지원시 Y2K문제 해결 여부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중소기업의 문제해결을 위한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정보화촉진기금 등의 정부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청장 추천으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Y2K자금 무담보 저리 융자를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지원자금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금의 종류, 대출금리, 대출한도, 자격기준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현장수요에 맞는 인력양성과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지원업체를 선정하고 「전문인력풀」을 운영하여 기술지원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민간전문 톨업체와 공동으로 인력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문제해결을 촉진할 예정이다.

홍보 및 국제협력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하여 Y2K문제를 해결할 경우 해당기업의 매출 및 수출증대 등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정부의 Y2K대응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한국전산원의 홈페이지(<http://y2000.nca.or.kr>)를 통하여 국·영문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99년 상반기 중 「Y2K 캠페인 주간」을 설정하여 그간의

Y2K문제해결 성과를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국제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각 부처별로 UN, APEC 등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 등과의 국제협력활동을 강화하고 외국의 Y2K문제해결 정보를 입수하여 전파하고 외국과의 연계모의테스트, 비상계획 등 협력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며 가트너그룹, G2K 등 국제평가기관에 우리의 대응상황에 대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통보하여 대외신인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모의테스트 중점추진

각 기관별 자체 테스트를 조속히 완료토록 독려하고 금융, 통신, 전력 등 분야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99년 상반기 중에 모의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간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금융, 통신 등 분야는 국제 모의테스트에 적극참여 예정인데, 금융분야는 미·일·영 등의 중앙은행간 실시 예정인 「Global Payment Systems Test」에 참여('99. 6월) 예정이며, 통신분야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실시하는 국제연계테스트(32개국)에 참여('99. 6월) 예정이다. 각 부처는 소관 중점분야의 모의테스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시 Y2K상황실로 즉시 통보하여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맺음말

Y2K문제해결 기한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그간에 정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및 단체와

언론이 합심하여 Y2K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문제 해결 추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지금은 각 분야별로 비교적 순조롭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금년내 Y2K문제해결 완수를 위해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체제와 관리체제를 보강하고 있으며 국방, 원전, 의료분야를 비롯한 각 분야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공동대응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Y2K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지름길은 없다.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각 기관 최고경영자의 결단과 실천이다. 이제는 경영자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만 하며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정부의 각종 지원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년의 경우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문제해결과 안정화를 위해 민·관의 협력이 매우 절실하다. 따라서 금년은 우리 모두의 역량을 모아 Y2K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한껏 올리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동 호



- 1981년 경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 1988년 연세대학교 산업정보학과 (공학석사)
- 1996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정책과정

- 1997년-현재 성균관대학교 정보공학과 박사과정
- 1985년-1992년 데이콤 행정전산사업단
- 1992년-현재 한국전산원 Y2K종합지원센터장
- 관심분야 : 정보공용활용, 전자정부, 멀티미디어 응용